

정부·지자체 등 공기관 홈페이지 ‘웹개방성 법제화’ 시급

☞ 웹개방성은 국민 알권리

(下) 정기진단 필요성

웹발전원, ‘웹개방성지수’ 개발
“각부처 기관 IT기술 평가때
웹개방성 항목 포함시켜야”

이용자가 웹 사이트의 정보를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웹개방성을 위해 매년 정기적인 진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을 통해 나온다. 공공성을 위해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하기관 주요 홈페이지가 대상이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웹발전연구소가 최초로 개발한 웹개방성 지수는 검색엔진 접근차단 설정, 자체 웹사이트 정보수집 차단, 페이지 접속 오류 등 네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모호할 수 있

<웹개방성 주요항목>

항목	진단기준	진단방법
특정 검색엔진 접근 차단	특정 검색엔진에 대해 해당 페이지를 노출하지 않거나 웹사이트에서 웹방화벽 등을 사용하여 검색로봇을 차단하고 있는가?	수동평가
검색 로봇 접근 차단	웹사이트에 검색 로봇을 차단하여 외부검색 사이트에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검색을 통제하고 있는가?	자동평가
페이지 정보 수집 거부	meta태그에 noindex, nofollow 속성을 설정하여 페이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가?	수동평가
페이지별 URL 차단	검색 결과에 대한 외부공유를 제한하고 있는가?	수동평가

/자료=웹발전연구소

는 웹개방성 여부를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었다. 웹개방성 지수는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웹사이트 내 사용자환경(UI·UX) 가이드라인과 구글 및 네이버 ‘검색엔진 최적화 기본가이드’ 등을 참조했다.

웹개방성 점검 기준을 위해서는 우선 검색엔진 접근차단 여부를 평가한다.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확장프로그램인 ‘User Agent Switcher’를 통해 검색엔진 문자열을

입력하고 출력화면을 확인한다. 검색 결과가 차단된 경우에는 특정 검색엔진의 접속이나 특정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및 열람이 필터링을 통해 차단됐다는 의미다.

검색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단 여부는 웹브라우저 주소 입력창에 /robots.txt 입력을 통해 검색엔진 접근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페이지별 정보수집 차단은 페이지 내 메타 태그에 noindex, nofollow를

설정해 페이지의 정보 공유를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기반 페이지의 URL을 다른 브라우저에 입력 후 콘텐츠 화면과 동일하게 나오는 지 확인해 페이지 접속 오류가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개방성과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해 전체 홈페이지는 개방하되 개인정보 보유 영역만 차단하는 방식으로 선별적 해제를 거친다.

웹발전연구소와 한국ICT인증위원회 대표인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이 같은 웹개방성을 평가한 논문으로 지난 2015년 감사원장상을 수상했다. 웹개방성 지수는 감사연구원이 발행한 ‘감사논집’에 게재되기도 했으며, 올해 배포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도 웹개방성이 들어갔다.

한국동서발전은 이 같은 웹개방성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웹개방성 인증을 받은 대표적인 기관이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공기

관 행정업무 혁신 일환으로 홈페이지 개편과 정보공개 등 7개 분야, 45개 메뉴의 현행화를 완료했다.

향후에는 이 같은 기관들이 더 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교수는 “올해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가이드라인에 웹개방성 부문이 들어간 것은 전향적이지만 아직까지도 정부 담당자들조차 인식이 덜 돼 웹개방성이 미약한 상태”라며 “누구나 인터넷 개별 사이트에 접근하기 쉽게 보장하는 웹접근성처럼 웹개방성도 법제화해야 한다. 오히려 장애인, 고령자가 대상인 웹접근성보다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웹개방성이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각 부처나 기관의 정보기술(IT) 부분을 평가할 때 웹개방성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이글이글’ 말복 더위

말복 더위가 기승을 부린 11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 위로 더위로 인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기상청은 12일 중국 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제9호 태풍 ‘레끼마’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곳곳에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했다. /연합뉴스

숨죽인 강남 재건축... 신축단지 호가 꿈틀

오늘 분양가상한제 도입방안 발표

강남 대치동, 오늘이후 더 떨어질 것
송파 주공5, 상승세 멈추고 문의 줄어
신축 매매, 공론화 후 4주째 오름세

정부가 12일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주말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매수자들이 관망하고 있는 것.

이에 비해 상한제와 무관한 기존 신축 아파트 단지는 집주인이 호가를 올리면서 지난달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주말까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범위와 강도에 따라 주택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상한제 발표를 앞두고 조용한 분위기다. 지난달 초 상한제 도입이 공론화된 이후 한차례 내려간 호가가 더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매수 대기자들이 “정부 발표를 지켜보고

움직이겠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정지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등을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영향인지, 지난달 초 3000만원가량 빠진 뒤로 추가 하락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정지권의 기류 등으로 가격이 급락하지 않았지만 상한제 변수가 여전하다 보니 거래는 거의 없고 조용한 상황”이라며 “12일 상한제 도입 계획이 발표되면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도 상한제 발표를 앞두고 한산한 분위기다.

전용면적 75㎡는 올해 최고 19억 9000만원까지 팔렸으나 지난달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뒤 매수 문의가 줄고, 상승세도 멈췄다. 그러나 고가 대비 4000만~8000만원 가량 낮은 19억 1000만~19억 5000만원 짜리 급매물은 최근까지도 거래가 이뤄졌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도 정부의 상한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일 재건축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건립 가구수가 1만 2032가구, 조합

원 물량과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이 4787가구에 달해 일반분양가에 상당히 민감한 상태. 일반분양가가 얼마에 책정되느냐에 따라 조합의 수익과 추가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둔촌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둔촌 주공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가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인한 예상 분양가가 조합 기대치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돼 사면초가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매도자, 매수자들 모두 정부 발표에 따라 움직이겠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표적인 재개발 단지인 용산구 한남뉴타운, 동작구 흑석뉴타운 일대도 거래가 뜸해진 채 매도·매수자들이 정부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새 아파트를 비롯한 일반 아파트값은 강세가 이어졌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운데 준공 5년 이내 신축 매매가격은 0.09% 뛰었다. 작년 11월부터 8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하다가 지난달 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공론화한 이후 상승 전환해 4주째 오름세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이수만 소유 ‘라이크기획’에 자문료형식 年 100억원 지급

>> 1면 ‘이수만의 주주 무시...’서 계속

이에 대해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라이크기획에 지급되는 자문료가 불법이 아닌 것은 모두가 알고 있던 내용”이라면서 “다만 경쟁사에 없는, 그리고 음반·음원도 아닌 별도 매출의 ‘6%’를 인세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거와 공정함을 지속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의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선 회사의 회계장부를 확인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전자의 경우는 회사의 의지가 없다면 불가능하고, 공정위는 “특별한 명분없이 회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주총회시 표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에스엠에 대한 이수만 회장 지분율은 19.04%다. 여기에 우호지분인 배용준 씨와 알리바바가 각각 4%, 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소한 이사해임 등 특별결의를 저지할 수 있는 발행주식 3분의 1 수준은 확보한 것이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지분은 알려진 것보다 적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기관투자자의 지분을 합치면 총 32.6%의 의결권이 모일 것으로 봤다.

이는 기관투자자 지분 중 상당부분이 국민연금의 위탁 자금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을 수 있다. 지분이 중복으로 계산됐다는 의미다. 에스엠에 대한 주주행동에 찬성하는 기관투자자의 지분은 30%보다도 낮을 수 있다.

◆ 에스엠의 아킬레스건 ‘라이크기획’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한투밸류는 ‘주주행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 다. 라이크기획에 들어가는 자문료가

주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판단이다. 라이크기획의 실제 소유주, 구체적인 사업내용, 세금 문제 등 어느 하나 해결될 게 없다.

라이크기획에 지불하고 있는 자문료도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수만 회장이 100% 소유하고 있는 라이크기획에 매년 1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해오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에는 에스엠으로부터 108억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그 해 에스엠 영업이익(109억원)의 99%가 라이크기획에 넘어간 셈이다. 또 지난해에는 145억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비합리적인 비용구조 때문에 주주 배당도 미뤄지고 있다. 현재 엔터 3사(SM·JYP·YG) 중 배당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회사는 에스엠이 유일하다. 에스엠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이유라고 밝혔지만 다른 엔터테인먼트 역시 일부는 미래 투자, 일부는 주주의 몫으로 돌린다. 단순히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보기엔 근거가 부족하다.

아울러 에스엠이 주주 제안을 건너치면서 주가는 일주일 새 13.4%나 빠졌다. KB운용이 주주 서한을 보내면서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던 6월 7일 주가와 비교하면 수익률은 마이너스(-)35.9%다. 날아간 시총만 4019억원이다.

이 연구원은 “주식회사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이 가장 무서운 것인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다. 충분한 검토 시간을 거쳤음에도 KB자산운용 등 주요 투자자들의 요구에 대해 모두 반박하며 하나의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부재한 것은 지분이 20% 내외에 불과한 최대주주 및 경영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음은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투자자들의 씀 없는 도전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